

 한국농어촌공사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처 농촌계획부 최종태부장(061-338-5421) / 제공일: 2021.10.28 (총 2매)		

농어촌公,

농어촌공간계획제도 및 농어촌빈집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 농어촌 생활권분석 및 빈집 활용방안 등 농어촌의 현안사항 논의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7일 나주 본사에서 농어촌 공간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현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과公社 지역개발 5부서 협의체, 각 도별 KRC지역개발센터 담당자 등 4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심재현 센터장이 ‘공간정보를 활용한 농촌중심지 및 생활권 설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심재현 센터장은 기존 농촌중심지 계층구조 분석과 생활권 설정 방법의 한계, 농어촌공간정보 분석·활용 방법 등을 소개하고, 공사가 농어촌공간정보 DATA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자체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 이어 농촌개발처 조초이 대리는 농촌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5개 시·군의 ‘농촌공간정비계획의 추진 사례’를 소개하며 농촌정책이 공간계획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 난개발 요소 정비, 농촌다움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실제 공간계획을 구상하는 현장관계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 농어촌연구원 윤상헌 박사는 ‘전라북도 장수군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및 지역개발이 연계된 빈집 활용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 장수군의 경우 현재 약 34%의 빈집이 철거대상인 상황으로 나머지 경우도 점 단위로 분포하여 빈집의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발표 내용의 현장 적용 방안과 함께 농촌정책이 효과적으로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김인식 사장은 “농촌이 지닌 환경, 경관의 강점을 살리는 농촌 정주체계 마련이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다”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제도 정착과 활용에 공사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